
에너지전환포럼 21대 총선 자료

- 정당별 기후·에너지공약 및 정책질의 답변 -

2020. 4. 3

에너지전환포럼

-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은 지난 3월 회원 및 시민과 함께 에너지전환 5대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총 25개를 마련했습니다.
- 5대 핵심과제란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전환에 대해 포럼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 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말합니다.
- 포럼은 이를 바탕으로 3월 20일, 23일 7개 정당에 21대 총선 정책을 질의했습니다. 대상 정당은 3월 13일 기준 의석수가 2개 이상인 주요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과 기후위기 공약이 구체적인 원외 정당(민중당·녹색당)을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 4월 2일 기준으로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민중당·녹색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포럼은 각 정당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과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본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 등 각 시민단체의 보도자료를 별도 첨부했습니다.
- 21대 총선의 정당별 입장과 기후·에너지 공약에 대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목 차

에너지전환포럼 21대 총선 정책질의 설명자료

정당별 공약 및 질의 답변

-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저탄소경제·미세먼지 대응 공약
- [미래통합당] 미세먼지 대책·원전 부활 공약
- [정의당] 그린뉴딜·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 [민생당]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공약
- [국민의당] 탈원전 정책 재검토 공약
- [민중당] 미세먼지·탈핵·기후위기 공약
- [녹색당] 주거·노동·식량 연계 기후정의·에너지전환 공약

[별첨 1] 타 기관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질의 답변

[별첨 2] 20대 총선 공약

에너지전환포럼 21대 총선 정책질의 설명자료

▶ 핵심 5대 정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3.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4.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5.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 세부 설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핵폐기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환경 및 입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고,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28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 전력시장이 독점구조로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재생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력원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요금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쪽으로 몰아 주기만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행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발전회사들이 의무할당비율(2020년 7%)만 맞추게만 하니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

자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수요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을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이나 산지 태양광 규제 같은 각종 규제인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부처 간에 중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은 부재합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이해로 무분별한 이격거리 등의 규제를 만들고 지역에서의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4)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큰 발전기가 특정 지역에 오랜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원전과 석탄발전소와 달리 전국에 다수의 발전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건설되다 보니 그에 맞는 전력계통과 전력시장이 필요합니다(전력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41.7%인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백만 개가 넘고 약 16년 만에 118기가와트의 설비가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깔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전력공급량이 변하기 때문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제도와 시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루 전에 전력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식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전력수요 반응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유럽 등은 실시간 전력시장으로 전력수요와 공급을 조정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소와 달리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에 적합한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5)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인 RE3020을 달성해도 2018년 말 기준 아시아 평균 재생에너지 점유율 22.1%보다 2.1%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상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세계 평균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신에너지 및 폐기물을 법령 분리하고, 지원하는 조항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 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항목만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제정하고 지원 및 육성해야 합니다.

2.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단일 배출원입니다.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20%, 온실가스의 30%,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의 10%를 배출합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부터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신규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고 있고,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도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1)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영국(2025년), 네덜란드(2030년)에 이어 석탄 주산국 중 하나인 독일(2038년)도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퇴출 시점을 발표하고 감축 절차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 확정과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2)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환경피해가 전기가격에 반영되면 석탄발전은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3%에 불과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2026년부터 시작하는 4차 계획 기간에는 100%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6개월간은 일부 석탄발전소를 가동중단하고 있습니다. 여유 발전설비와 수요자원용량을 감안하면 절반까지는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 석탄발전을 최대 15기까지 줄였더니 미세먼지 배출량이 36%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시즌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확대해 한국 사회에서 탈석탄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프리카의 후진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소한 유엔 IPCC 1.5℃ 보고서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0년 대비 2030년 45% 감축,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당장 강화해야 합니다. 영흥석탄화력발전소와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배출기준 예외 인정도 금지해야 합니다.

시도별로 지역의 배출 특수성을 감안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제정한 인천과 충남은 더 강화하고, 배출량이 많은 강원, 전남, 경남, 충북, 경북, 울산 등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시급합니다.

6)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해외 석탄 투자 TOP 3개국은 바로 한·중·일. 1위는 중국, 2위는 한국, 3위는 일본입니다. 국내에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해외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미세먼지의 배출원별 비중은 경유차가 22%,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20%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유 소비는 휘발유 소비의 두 배가 넘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등록 차량의 40% 가 넘는 1천만 대가 경유차인 데 반해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는 2.5%, 60 만대에 불과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경유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 퇴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 OECD 평균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경유세 인상과 함께 적극적인 경유차 규제, 조기 폐차 지원을 동시 추진해야 합니다.

2)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발전과 수송부문 에너지원별로 서로 다르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이 목적세가 부과되는 등 에너지 과세구조가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의 73%는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목적세 형태의 세수를 일반회계로 귀속하는 방식의 일관성 있는 에너지 과세구조로 조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에 대한 세출구조를 조정해 애초 목적에 맞도록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3)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와 친환경 신차 구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4)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전기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배출저감장치 지원이나 폐차 지원금 제공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지연시킵니다.

4.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의 에너지 소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40%가량 높고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에너지 원단위도 OECD 35개국 중 33번째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전환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감축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2)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이미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도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히 평가해야 합니다.

3)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에너지효율정책이 시행되는 건물, 산업, 운송 분야 중 건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합니다.

전체 건물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기존건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택은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와 직접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과 에너지 인증제 도입,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의무화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5.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우리나라는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4기가 신규 건설 중입니다. 12기의 원전은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대도시 인근에 분포해 있는데 이들 지역은 경주지진 이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임시 저장 중인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는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원전은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도 대기와 바다에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함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상충되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원자력진흥법에 의해 과기부가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원전관리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비상임위원이므로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무 파악과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전안전 업무의 방향은 사무처가 정하며 원자력진흥 업무를 맡았던 관료 출신이 사무처를 이끌고 있어 위원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상임위원으로 위상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정무적 판단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2)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원전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전의 방사능 안전은 전력수급과 상관없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확보에 절대적인 관련 정보의 공개와 모니터링, 전문가들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고나 고장으로 원전 정지 후 재가동 시에는 원전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기본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은 원전확대를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며 안전성이 뒷전이었던 경주 방폐장 선정과정을 조금 늘려놓은 것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과 처분장에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핵폐기물을 회수한다는 ‘회수 가능성’의 원칙(국제기구에서도 권고)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액·기체 폐기물 분석오류 시 검증 없이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2014년 8월 한빛 6호기 기체폐기물 분석오류에도 무단배출)하므로 현행 관리 감독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독기관 통보확인 이 아닌 불시 점검 수행으로 전환하여 현장감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4)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도입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10여 기의 원전이 집중되어 있어, 다수 호기 동시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며, 다중 호기 사고에 대비하여 실제 부지의 특성과 기상을 고려한 방사능 이동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기대응 및 주민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방재계획은 방사능누출 시 전원이 끊기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설계기준 사고가 기본으로 수립되어 있어 전원상실에 대비한 계획수립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노심 손상 진행 파악 등 중대사고 진행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5)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신고리 5, 6호기 부지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수억 년간 안정화 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년 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 4기의 매우 젊은 지층으로 언제 단층운동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한 지역입니다.

6)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원전은 운전 연수 증가에 따른 경년열화 및 마모에 의해 발행되는 불일치보고서(NCR:Non Conformance Report)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 시에 품질확보를 위한 반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인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 설치, 이동형 발전차 호기당 1대 확보는 물론 원전 내 방폭설비 개선,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유효한 기술기준이 강화되지 않고 있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 저탄소경제·미세먼지 대응 공약

정책순위	정책목록
1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과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4	주거와 안전에 취약한 청년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에서 국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6	국립대학의 교육의 질은 높이고 등록금 부담은 낮추겠습니다.
7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8	스마트 정예 강군, 국익 외교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을 만들겠습니다.
9	수요 맞춤형 사회안전망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0	“문화·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목 표

-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및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 산업혁신 추진
-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
-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에너지 분권체계 구축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mu\text{g}/\text{m}^3$)으로 40% 이상 감축

▶ 이행방법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탄소제로사회의 법·제도 기반을 마련을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
-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하게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순환경제 토대를 구축
-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을 통해 PNG 인프라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2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육성
- 분산전원 기반의 Smart-Green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 건물·공장(FEMS)·주택에너지관리(HEMS) 분야 에너지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 그린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로 민간주도 투자 확대
- 녹색경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 확대
-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유도
-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더욱 확충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부문에 투자 확대
- 지자체별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하여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 지원
-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제공
-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 소규모 전력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제도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mu\text{g}/\text{m}^3$ 로 감축
- 오염물질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전략과 권역별 총량제 추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 구성 운영
- 산단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측정차량을 활용한 실시간 단속 강화·무인비행선 운영 확대
- 1-3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확대 및 4-5종 사업장 배출가스감시센서 부착 확대
- 4-5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00개소로 확대
-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 클린도시 시범사업 추진(도심지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구축, 대피용 클린 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용 쿨링·클린 로드 조성, 신숙 및 중장기 저감조치 시행)
-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 이행기간

- 2020년 ~ 2024년까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제로화 사회 실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국비와 지방비 및 기금 활용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질의 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	
-PPA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발전·판매 겸업 허용에 대한 국회내 합의가 선행될 필요 -또한, 도입 시에도 계약전력 부족분 공급방식, 별도 망이용요금 등에 대한 보완방안 사전 검토 필요 -현재 법률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면서 PPA와 유사한 효력이 있는 제3자 PPA(한전 중개)를 도입할 계획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필요성에는 동의 -다만, 이를 위한 별도 조직(컨트롤타워)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부처 간 협의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 -이미 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가 재생 에너지 확대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중요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에 친화적으로 전력시장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 보강(재생에너지 종합관제시스템 등)을 지속할 필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세계적 에너지전환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다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수준이 낮고('18년 8%) 정부에서 이미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를 발표하여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목표 상향조정에는 신중할 필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신재생에너지법상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국제기준과 다른 비재생폐기물 등은 이미 제외하였음('19.10)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으로 친환경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정부 정책으로 수소, 연료전지 등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법 분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감축 속도 등에 있어서는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필요성에는 동의 -다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상향 필요성과 그 정도는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및 전력수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전력수급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 등을 최대한 확대할 필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현재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장기저탄소전략을 수립 중으로, 실현 가능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감축 목표 설정 필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19년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15년 대비 약		

2배 강화되었고, 금년부터 권역별 총량기준도 시행 중임 -앞으로도 발전사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나, 발전사의 환경설비 추가설치여력 및 기술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속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해외석탄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갈 예정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OECD 수출신용협약보다 더욱 엄격하게 친환경, 최고효율의 저탄소 초초임계압(USC) 기술 적용 석탄발전에 한정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 -그러나 상대가격 비율 인상은 사용량 억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중소기업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며, 미세먼지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함*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내 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국책 연구기관 공동 연구용역, '17.8) : (휘발유:경유 100:90) △0.2%, (휘발유:경유 100:120) △1.3%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환경부문 예산을 추가하여, 경유차 조기폐차, 친환경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교통부문 미세먼지저감 우선 사용 추진 중에 있음 -에너지소비에 따른 외부비용 내부화 추진 및 환경부문 예산 추가확보 필요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적용 중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내연기관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필요성에 동의 -다만, 구체적인 전환 속도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특정 목적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원가와 외부비용의 변화 및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기 수립된 국가에너지효율혁신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예산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동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 다양화 및 지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은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며, 에너지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로 '녹색성장법'과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 -또한, '19.6월 수립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기 제시하였음 -원안위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으로 일부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KINS의 독립성 강화에 대해서도 동의함(관련 정부 법안 제출되어 있음)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동의. 관련 법안도 김성수 의원에 대해서 발의되어 있음. -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현재 재검토위원회 중심으로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동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정책 수립 예정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추진 중인 정책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추진 중인 정책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한국수력원자력은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선제적 설비 교체 및 노후화 설비 교체 계획 수립하여 이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점검 및 품질관리 필요		

[미래통합당] 미세먼지 대책·원전 부활 공약

정책순위	정책목록
1	우한 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2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3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4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5	자유시장, 내 집 마련
6	씩 다 갈아엎는, 文정권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
7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8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
9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 복지안전망 구축
10	함께 하는 세상!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 반려동물, 원손잡이 권익향상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로]

▶ 목 표

-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 이행방법

-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
 - 탈원전 에너지 정책 폐기,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육성 및 원자력 안전 강화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월성 1호기 재가동
 -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자금 우선 조달, 원자력학과 학생들 학업 관련 특별 조치 강구
 -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 국제공동연구 참여 통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

▶ 재원조달 방안

- 탈원전정책을 투명하고 안전한 원전유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발전기금 등 활용

[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 中]

▶ 목 표

- (환경 관련 목표 無)

▶ 이행방법

- 미세먼지 감축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강화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강화와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확대
 -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 망국적 탈원전 정책 폐기

▶ 재원조달 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19~23년) 계획상의 예산증가분(평균 6.9%)*를 활용

*2021년의 경우에는 예산증가분이 33조원 규모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질의 답변〉

- 미래통합당은 응답하지 않음

[정의당] 그린뉴딜·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공약

정책순위	정책목록
1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2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3	부동산 투기 근절, 서민 주거 안정
4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5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맘에 정직한 나라
6	골목경제 활성화, 농어민 삶의 질 제고
7	정의롭고 안전한 복지국가 실현
8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9	국민주권을 위한 정치·국회·정부·사법 개혁
10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한반도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 목 표

-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 이행방법

- 2030년까지 전기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 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 혁신적이고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분산형 발전설비 운영 투자(10년간 약 200조 원)로 약 20만 개 일자리 창출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여 2030년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전기차 대체로 2030년 1,000만 전기자동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및 도심 진입 금지 확대
 - 자동차 주행거리를 단축 시키기 위한 걷기 편한 거리 설계, 자전거 도로 10배 확충, 공유 자동차 확대 정책 시행
- 정부 주도로 표준화, 범용화 전기자동차 고속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저(Korea Charger) 프로젝트’ 추진
 - 전국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별 주요 거점 충전 인프라를 설치하여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문제 해결
 - 고속도로 휴게소의 태양광 그늘막, 소음차단벽, 태양광 터널 등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코 고속도로(eco-highway)를 추진
- 200만호 그린 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 추진
 - 20년 이상, 20평 이하 저소득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 지정, 연간 20만호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
 - 1가구당 2천만 원 보조금 또는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6만여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 새로 짓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하여 환경과 효율,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실현
-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뉴딜에 따른 피해 노동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 수립
 -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을 조성하여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들에게 일정 기간 구직지원, 창업자금 지원, 4대 보험 지원
 - 안전망 기금을 통해 중소 소재 부품업체들과 지역 산업 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 진출 지원
 - 그린뉴딜 전환과정에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위계층 복지를 강화할 복지 정책들을 추가로 제도화

▶ 이행기간

- 2020년~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등으로 매년 GDP의 1~3% 녹색투자재원 마련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질의 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제도(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생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연계할 정책적 수단도 필요함 - 특히 현행 RPS 제도의 의무할당비중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의무할당비중을 높이고, FIT 제도 병행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은 전력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의 전력판매 시장 진출 ,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 방안 ,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임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조정, 석탄화력발전 조기 가동 중지를 반영한 2030년 국가 에너지 믹스 계획 수립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함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전담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함 -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 부품산업,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 활성화 지원.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이 초기 자본의 일정 지분투자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녹색산업 활성화법」제정을 공약함 -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 이상을 녹색 혁신에 투자하여 그린뉴딜 정책 추진의 자립적 기술기반을 뒷받침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에너지전환과 녹색 혁신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을 공약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달성을 공약함 -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함 -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을 중단 시키고 에너지를 전환할 것을 공약함 -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에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 톤당 75달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탄소산업에 지원되는 일체의 보조금과 지원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함 - 배출총량제 대상물질과 배출허용기준에 미세먼지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동중단 조치할 것을 공약함 -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한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일수를 현행 보다 확대할 것을 공약함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 -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용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 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낮은 전기요금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할 것을 공약함 - 에너지 과소비업체의 에너지 수요관리 의무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달성 등 OECD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공약함 - 전국의 중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존(Green Remodeling Zone)”을 지정하여 연간 20만 채 수준으로 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달성을 공약함 -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추진 및 민간임대주택 주거품질 규제 도입 및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공약함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 탈핵 조기달성을 공약함
- 핵발전소의 모든 고장·사고 정보, 연구용 원자로 등 핵 취급시설의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핵안전 현안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 단체가 제 3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지원, 핵발전소, 핵시설과 30k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안전협정을 맺고 주요 사고에 대한 재가동 ‘동의권’ 및 ‘입회조사권’ 부여 등을 공약함
- 고준위핵폐기물은 직접영구처분 원칙을 수립할 것을 공약함
- 사용후핵연료저장소 등 핵발전소 테러 대비가 취약한 시설 안전보강 추진 등을 공약함

기타의견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 발전소 안과 밖을 이원화하여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발전소내 사고에 전력하고 발전소 밖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고 한수원과 규제기관은 지원 업무
- IAEA에 준한 동북아 핵안전감시기구 설립, 동북아 국제협력체계 구축 추진
-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실험과 고속로 개발 중단
- 고준위 핵폐기물 총량 결정 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재추진
- 생활방사선에 대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핵 안전문제 교육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지역 방사능감시센터 설립
- 원자력사고 책임정의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사고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손해배상기금 신설
- 사업자가 분담금 납부 또는 공탁하도록 하고 원자력손해배상보험의 현실화를 포함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개정
-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폐로지역에 대한 지원과 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폐로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완화

[민생당]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공약

정책순위	정책목록
1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극복 수당 지급
2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 행정 신뢰·효율성 증대
3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
4	투기꾼에게는 세금을,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5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6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
7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익형 직불예산’ 3조원 확보
8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
9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10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세먼지 50%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

▶ 목 표

- 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는 50% 줄이고,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이행방법

- 미세먼지 대응!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4천개소)에 시설보급
 - 양궁, 축구, 농구, 볼링,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 *1개소당 6천만원×4,000개소= 2,400억원 확보

-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 통유리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 호남권 등 기후 · 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정 계획으로 추진
 - 국내·외 기후피해 및 손실, 미세먼지 피해 대응기금 조성

▶ 이행기간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21년)
 - 2021~2030년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21년)

▶ 자원조달방안 등

-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 시장 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소요 비용의 배분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시장경제 시스템 활용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질의 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제도(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		

[국민의당] 탈원전 정책 재검토 공약

정책순위	정책목록
1	국회법과 정당법 개혁하여, 일하는 정치 실현하겠습니다.
2	권력의 사유화 막고, 민주적 통제 강화하겠습니다.
3	정부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미래정부로 재정립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4	로스쿨과 의전문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시켜 공정사회 실현하겠습니다.
5	질병예방통제청(가칭), 美CDC수준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6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가족이 행복한 사회 구현하겠습니다.
7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8	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9	대학입시 정시를 70%로 확대하고, 특목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백지화하겠습니다.
10	한미 핵공유시스템 구축하고, 첨단과학강군 육성하겠습니다.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신성장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中]

▶ 목 표

○ (환경 관련 목표 無)

▶ 이행방법

○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4세대원전(SFR, 소듐고속증식로)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질의 답변〉

○ 국민의당은 응답하지 않음

[민중당] 미세먼지·탈핵·기후위기 공약

정책순위	정책목록
1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2	농산물공정가격실현, 농민수당전면시행
3	투기꾼잡고, 집걱정 잡자!
4	한반도 평화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5	국민을 위한 국회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6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추진!
7	미세먼지 대책
8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9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보장
10	취준생을 위한 청년이직준비급여
...	
14	영구적 탈핵과 전면적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중당 홈페이지](#)

[미세먼지 대책]

▶ 목 표

-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자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 강화
- 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관리강화

▶ 이행방법

-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 겨울,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폐쇄
- 석탄화력의 환경, 건강비용 반영한 에너지세제 및 전력시장 개편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확대, 대기배출부과금 오염자부담원칙 실현,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TMS) 실시간 공개
 - 예외허용 금지, 기존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
-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영구적 탈핵과 전면적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1) 에너지기본법 제정

▶ 목 표

-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원천적으로 봉쇄
-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로 법적 근거 마련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시민 에너지기본권 보장

▶ 방 법

- '에너지기본법(가칭)' 제정
-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원천적으로 금지
-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명 이상이 거주할 시 주민요구가 있을 시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조기폐로 결정허용

2) 핵발전소 운영허가 갱신제 도입

▶ 목 표

-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10년 단위로 갱신하고 조기폐로 유도

▶ 방 법

- '원자력안전법' 전면개정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강화해 최신 안전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면 운전을 중단하도록 해 사실상 운영허가를 갱신
- '에너지기본법' 제정 시 운영허가를 줄일 수 있는 소급조항을 두어 법적 미비 해결

3) 핵발전소 중대사고 방지대책 강화

▶ 목 표

-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PSA) 즉각 도입 및 전체 핵발전소 부지별 적용 - 갑상샘방호 약품(KI) 사전배포 법제화

▶ 방 법

- '원자력안전법' 을 개정해 KI 사전배포 법제화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발 중인 다수호기 PSA 기법을 조기에 완료(2022년 예정)하고 전체 핵발전소 부지를 대상으로 평가진행

4) 주민밀집지역 핵발전소 조기 폐로

▶ 목 표

-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인구 50만 명 이상이 생활 시 주민투표를 통해 조기폐로 가능토록 조치

▶ 방 법

- '원자력안전법' 전면 개정 및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반영

5) 기후위기대응 1. 온실가스 배출 제로

▶ 목 표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 방 법

-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 (이하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
 - 2009년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 법에 따라 탄소예산을 도입한 바 있음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도상승 우려에 대해 IPCC는 2018년 지구 온도상승 폭을 1.5℃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음
-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과 예산을 정함에 있어 탄소예산 상한에 맞추도록 함
-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 수정 로드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건설계획 백지화가 가장 명확한 방법임
- 석탄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인 충남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이 모두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요구하고 있음

6) 기후위기대응 2. 기후위기 기본권일자리 보장

▶ 목 표

-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 등의 기후위기 기본권 보장
-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좋은 일자리 양성'

▶ 방 법

-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 권리 보호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건설업과 같은 야외 노동자에 국한 되지 않는) 직종별 폭염 대책 설정
ex. 건설업의 경우 폭염·한파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책정, 플랫폼 노동자 휴게 공간 보장, 협력업체의 경우 냉방 설비 설치 지원 의무화 등
- 지역 에너지위원회 및 전담실행조직의 역할 전환과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 정부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역에너지공사(센터) 등 전담실행조직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에너지공사(센터)가 재생에너지 확대만을 담당해 왔다면, 이후에는 노동자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데이터 및 고용전환 자료들을 구축할 수 있는 허브이자 일자리 연계의 중심축 역할로 전환하도록 함
- 지역에너지위원회 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자문 및 계획수립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를 기점으로 한 신규 사업 및 산업지원
- 재생에너지 산업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R&D 증대
- 지역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 좌초산업으로 분류되는 철강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감축목표를 지정하여 정부에서 관리(목표관리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질 좋은' 재생에너지 일자리 공급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질의 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 제도(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		

[녹색당] 주거·노동·식량 연계 기후정의·에너지전환 공약

정책순위	정책목록
1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
2	차별·폭력·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3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4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5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6	동물학대 제로사회 ‘동물권 보장’
7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8	특권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9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 ‘복지’
10	수도권 집중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탈토건’

출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참여하는 정당 10대 정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기후·에너지’]

▶ 목 표 1

- 2050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 이행방법

-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 법안 심사 및 처리
-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과 연동된 한국의 탄소예산을 추정하고,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
- 공공정책 전 분야에 걸쳐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탄소영향평가 도입
-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비상시민의회 구성

- 탄소세, 토건 예산 감축, 탄소배출기업 과세, 사치품목 소비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을 통하여 그린뉴딜 기금 조성

▶ 목 표 2

-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시민보호

▶ 이행방법

-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인프라와 그린 리모델링
 -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접목하고,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관리분야에서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공공기관·어린이집·임대주택·노후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정책 우선 시행
- 하수도, 도로, 건물, 통신시설 등 도시의 중요 인프라 점검 및 보강
- 재난 및 구호 시스템 강화

▶ 목 표 3

- 2030 탈핵

▶ 이행방법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
- 범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핵폐기물 처분계획 가역성과 핵폐기물 회수가능성 원칙 반영
- 중저준위방폐장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상으로,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개정
- 해외 원전 건설 사업 추진 중단
-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핵발전소 안전 체계 적극 개선
- 탈핵 에너지전환 교육 홍보 강화

▶ 목 표 4

- 원자력특권구조 철폐

▶ 이행방법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진흥위원회 철폐
- 우라늄에 핵연료세 부과
- 원자력연구원을 의료와 안전기술 분야와 기초 연구 분야로 분리하고 핵발전 및 핵재처리 연구부문 폐지

▶ 목 표 5

- 에너지효율 확대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 50% 절감

▶ 이행방법

-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요금 정상화 (탄소세 부과 포함)
-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에너지 플러스 빌딩화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축소 및 전환

▶ 목 표 6

-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 이행방법

- 녹색요금제 도입
- 재생에너지를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 구축
- 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속한 계통 연계를 위한 지역그리드 확충, 스마트 그리드 및 가상발전소 도입 및 운영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에 대한 대비책 확보
-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
- 지자체 및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이익공유제 전면 도입
- 동북아 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 목 표 7

- 에너지 기본권 및 분권보장과 민주적 에너지전환

▶ 이행방법

- 기본적 수요에 대해서는 무상 제공(무상전기, 무상가스, 무상열)하고, 사회적 연대 및 징벌적 요금으로서 누진제 강화 및 확대(상업용 및 산업용까지)
- 주거 및 교통 복지 강화 및 에너지전환 연계 강화(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 전력3대 악법 개정, 송전거리 차등 요금제 및 지자체별 에너지자립도 목표 관리 제도 도입
-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에너지전환이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中]

▶ 목 표 3

- 주택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획기적 감소

▶ 이행방법

- 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제시
-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에 에너지 효율화 의무화
- 민간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中]

▶ 목 표 1

-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 이행방법

-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 탄소배출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 마련
-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 지원
-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中]

▶ 목 표 4

- 녹색 정의로운 일자리

▶ 이행방법

- 녹색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
-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하여 에너지 자원 절약적이고 노동집약적 산업 전환 우선 지원
- 사회적경제 확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정의 실현 中]

▶ 목 표 1

- 기후위기와 재난을 극복하고 준비하는 농촌, 농민

▶ 이행방법 中

- 농생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친환경·유기농 지원 강화
- 토종종자 보급 및 시장 활성화
- 다양한 채식활성화 및 보급
- 농경-축산 순환 경작 지원
- 음식물쓰레기 및 축산농가 분뇨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 도시농업 확대
- 기후위기와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학교 교육 제도화

[특권 없고 유능한 국회, ‘정치개혁’ 中]

▶ 목 표 5

-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

▶ 이행방법 中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전환의 필요성을 헌법 전문에 포함
- 노동, 복지, 교육, 인권, 환경 등에 걸쳐 기본권 강화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당 질의 답변〉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 (PPA) 도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구축	○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40%로 상향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 분리	○	
관련 의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지역기반 공동체 에너지전환이 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 하고,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의 회복력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문제가 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	○	
석탄발전 환경피해비용 100% 내부화	○	
겨울~봄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엔 IPCC 1.5℃ 보고서 수준으로 상향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	

관련 의견
-녹색당은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IPCC 보고서가 제시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채택한 '2050 net zero(순배출제로)'를 넘어 2050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기술주의적 해법을 기대함으로써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전략이 엄중하게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	○	
에너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구조 개편	○	
경유 화물차 대상 구매보조금 적극 지원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	○	
관련 의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일몰 즉시 폐지하고, 포괄적 의미의 탄소세 재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유차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의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	
에너지효율 정책의 충실한 이행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다양화	○	
관련 의견		
-녹색당은 에너지전환의 전제가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정책 관련하여,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정책들과 함께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저 주거기준 내에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정책요구안	동의	부동의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과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안전체계 개선	○	
원전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 의무화 및 3자 검증제도 도입과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법안 보완,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 개선	○	
원자력시설 지역 실질적인 방재계획 수립,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제	○	
활성단층 포함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상향조정	○	
노후화된 설비의 교체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설비에 대한 중장기 설비 개선계획수립 반영	○	
관련 의견		
-녹색당은 기후위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당위성과 그 이행전략이 탈핵 목표를 후퇴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2030년 탈핵 시나리오를 채택하며, 2030년 탈석탄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진적인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기타의견
-귀 단체가 보내주신 정책제안에 동의 의사를 밝히며, 탈핵 ·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공동 협력의 정치사회적 과업에 우리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녹색당은 IPCC 보고서가 언급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을 위해 녹색당의 모든 사회, 경제 정책의 목표와 기준을 기후위기 대응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일상을 기후위기로 부터 지키는 ‘그린뉴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선정했으며, 주거, 노동, 복지, 교육 등 일상 전반의 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별첨 1] 타 기관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질의 답변

▶ 그린피스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기후위기 정책 ‘나몰라라’...정의당, 답변 진일보 (03.12)

그린피스, 4·15 총선 앞두고 주요 정당에 기후위기 공약 설문 조사

글: Sean_Lee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질문에 답변 유보·회피...양당, 탄소세 도입에는 부정적 민주당, 정부 정책 ‘앵무새’...통합당, 원자력발전 집착 여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이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5% 안팎의 정의당만이 진일보한 기후위기 대책을 내놓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KBS와 함께 지난달 13~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정의당(여론조사기관 갤럽 조사 결과 지지율 5% 이상)의 당대표실과 정책위원회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정책 관련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린피스는 각 정당에 2050년 이전에 넷제로(net-zero, 온실가스 배출 제로) 실현,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한 질문 11개를 물었고 각 당 정책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보내왔다.

각 당 정책위가 보낸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후비상사태 선언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여부 등 주요 질문에 확답을 회피하거나 유보했다. 민주당은 기존 정부 정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통합당은 원자력발전에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정의당은 기후위기 관련 주요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실행방안 등 구체성을 보완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당은 비상사태 선언에 공감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확답하지 않았다. 또 국제 사회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 확답을 피했고 통합당은 목표 수치를 정해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기후위기 정책을 외면하는 행태는 기독교민주연합,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 주요 정당들이 기후위기 대책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크게 대비된다. 특히 영국에서는 집권 보수당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넷제로(net-zero) 법’을 제정했다. 영국 보수당은 또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시점을 당초 204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도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그린뉴딜을 유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그린뉴딜 공약을 내세우며 △기후위기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100% 청정·재생에너지 경제 기반 구축 △2050년 이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등을 약속하고 있다. 예일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2018년 미국 유권자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 64%가 그린뉴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양대 정당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대응이 필수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정책(3020 재생에너지 목표)를 조기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기존 정부 정책대로 추진하면 조기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통합당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양대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설정하는데 부정적이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기후위기 정책 '나몰라라'...정의당, 답변 진일보\(그린피스, 2020.03.12.\)](#)

[보도자료] 유권자 77%, “총선, 기후위기 대응 후보·정당에 투표” (02.28)

응답 86.5%,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해야”...

70% 이상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등 그린뉴딜 정책 도입에 동의

글: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유권자 1000명 대상 기후위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4%,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 제시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 의향

응답자 70.7%, 정치권이 기후위기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인식

응답자 86.5%,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필요성 공감

정당 기후 정책 모른다 88%, 주요 이유는 정당들이 기후 관련 정책 없기 때문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0’(90.0%), ‘그린뉴딜 국내 도입’(92.7%) 필요성 동의

그린피스 “주요 정당, 국민 여론 수렴해 기후위기 대응 공약 발표해야”

한국리서치,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3.1%

4월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유권자 네 명 중 세 명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권자들은 또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함에도 각 정당이 이와 관련한 정책을 갖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각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문제의식은 높지만, 정치권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월 12~17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유권자 인식 조사'에서, 조사 대상 유권자 중 77.4%가 4월15일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같은 응답은 총선의 향방을 가를 40~50대 유권자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각 정당의 기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정당들의 기후 정책을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88.0%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당들이 기후 관련 정책을 세우고 있지 않음을 그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59.5%).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이 기후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공약을 수립할 경우 관심 유권자를 선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기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88.0%에 이른 반면,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86.5%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의회 차원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90.0%나 동의했으며, 그린뉴딜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 역시 92.7%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83.0%는 기후위기 대응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이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기후위기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70% 넘게 나왔다.

응답자들은 그린뉴딜 정책의 세부사항(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로드맵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 석탄 등 화석연료 퇴출, 100%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세 도입, 전기차 전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70% 이상 동의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기후위기를 꼽았으며(1순위 1위, 37.0%), 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는 질병/전염병을 꼽았다(2순위 1위, 33.4%). 1순위와 2순위 합계에서는 질병/전염병이 가장 심각한 문제 1위(56.0%)로 나타나, 최근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기후위기도 55.7%로 오차범위 안의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그린피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Computer Aided Web Interview)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 3.1%이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최근 호주 산불과 강원과 제주도 이상기온 등 영향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적극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난해 말과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기후위기 대응 총선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의당은 이를 대부분 수용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유권자 77%, “총선, 기후위기 대응 후보·정당에 투표” (그린피스, 2020.02.28)

▶ 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 (03.1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질적인 대응정책 제시 못해
정의당, 녹색당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

3월12일 오후1시, 광화문광장에서, 35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 (이하 비상행동)은, 각 정당들에 대한 기후위기 총선정책 질의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4일, 비상행동의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3월11일까지 회신해온 답변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요구안은 1)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 2)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안 제정, 3)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4)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루어져있다. 질의 대상은 전체 원내정당 9곳과 원외정당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답변 결과,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정의당과 녹색당만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진전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비상행동은 총선을 불과 한달 앞둔 시점에도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기후위기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정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21대 국회에서 다룰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자회견문 (03.12)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맞닥뜨린 과제를 인식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는 정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지 오래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는 많은 위기가 놓여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감염병 위험만이 아니라, 바로 인류가 접한 적이 없는 거대한 위협, 기후위기가 놓여있다.

새로운 국회를 준비하는 이 시기, 각 정당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그 해결책들을 내놓을 책무가 있다. 과연 각 정당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중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국회와 정당의 역할을 4개의 정책 요구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둘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기후대응법안 제정, 셋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넷째, 탈탄소사회전환을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의 기반 마련이 그것이다.

비상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원내외 10개 정당들에게 물었고, 그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국회 원내 9개 정당 중 답변을 보내온 정당은 5개 정당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답변에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답변에서는 진정성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검토가 필요”하고 “협약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고, 총선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기후위기 공약 마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4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채, 각각의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기후위기는 핑계일뿐, 핵발전의 확대가 그들의 실제 관심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미래통합당의 정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이다.

그나마 기후위기대응에 가장 진전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은 정의당, 녹색당이었다. 두 정당은 비상행동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서 ‘그린뉴딜’과 같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파리협정 이행과 1.5도 목표를 향해 과감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정당의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수준은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눈앞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지 과감한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 뜨고 있고, 더 많은 미래세대들이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정당들은 기후위기에 맞설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정책요구에 동의한 정당들은 실제 21대 국회에서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손놓고 있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 정책 요구에 대한 각당 정책 입장 평가

정당	평가	4자약평
더불어민주당	4대정책 동의함 - 각 정책에 대해 동의했으나, '검토필요', '협의필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 - 구체적인 공약 없음	의지박약
미래통합당	4대정책 동의여부를 답하지 않음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비상행동 정책요구안과 상반됨 - 시급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시 못함	기승전핵 (핵발전)
정의당	4대정책 동의함 - 그린뉴딜 10대 공약 마련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	타의모범
국민의당	4대정책 동의함 - 정책의 구체성과 적극성 매우 미흡	한참부족
민중당	4대정책 동의함 - 적극적인 정책을 담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정책 제시	분발기대
녹색당	4대정책 동의함 - 그린뉴딜 정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 -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제시	타의모범

각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

* 회신 정당 대상

정당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국회 내 특별위원회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마련 (예산, 법제도 등)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탄소배출제로, 기후정의 등)
 더불어민주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미래통합당 UNITED FUTURE PARTY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정의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민중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국민의당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녹색당 대한의 숲, 전환의 씨앗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각 정당별 평가

정당	정책 동의	답변내용
 더불어민주당	○	 의지박약
 미래통합당 UNITED FUTURE PARTY	무응답	 기승전핵
 정의당	○	 타의모범
 민중당	○	 분발기대
 국민의당	○	 한참부족
 녹색당 대한의 숲, 전환의 씨앗	○	 타의모범

자료: 기후위기 비상행동

* 회신 정당 대상

출처 : [보도자료] 기후위기 외면하는 거대정당 총선정책(기후위기 비상행동, 2020.03.12.)

▶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30년 석탄발전 퇴출” 요구, 정의당과 녹색당 공약화 (03.25)

“2030년 석탄발전 퇴출” 요구, 정의당과 녹색당 공약화
 민주당 ‘석탄발전 과감한 감축’ 원론적 입장 되풀이, 탈석탄 목표 시점은 회피
 미래통합당 원전 확대 내세우며 탈석탄 문제는 방관하고 외면
 정의당 ‘2030년 석탄발전 폐쇄’,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공약
 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앞두고 각 정당의 석탄발전 감축 공약평가

2020년 3월 25일 —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 주요 정당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은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이 유일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 원외 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석탄발전을 보다 과감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 퇴출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정부 정책 보다 진전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전면에 내세워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으로서 원전의 확대에만 관심을 둔 채 석탄발전 퇴출 문제는 방치한 황당하고 무책임한 공약이다.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이 유일하게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50% 감축,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각각 공약해 여야를 막론하고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원외정당인 녹색당도 203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 공식화를 공약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해마다 1천명의 조기사망에 달하는 건강영향을 일으키는데다 석탄발전소가 계속 확대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파리협정 목표의 3배 이상 초과해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한 것이란 경고가 거듭되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및 법제화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공

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구호를 넘어 석탄발전소 퇴출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공약도 제시됐다. 정의당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대적 전환하기 위해 10년간 200조원을 투입해 20만개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과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을 약속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지원되던 막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약도 최초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석탄금융을 중단하고, 녹색금융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공적 금융의 탈석탄 원칙을 수립하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녹색당도 해외 석탄발전소 및 화석연료 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러 정당이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공약한 반면, 미래통합당, 자유공화당, 국민의당 등 일부 정당은 탈석탄 관련 공약을 전혀 내놓지 않아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인식과 대응 의지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을 드러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이 말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구호로 외치지만, 주요 오염배출원인 석탄발전의 퇴출에 대한 공약은 정작 미온적”이라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총체적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1대 총선 석탄발전 퇴출 관련 정당 공약 현황

	석탄발전 퇴출시점	탈석탄 금융 정책	석탄발전 대체 에너지원	고용 · 지역경제 전환대책
더불어민주당	미포함 ("석탄발전 과감한 감축")	석탄금융 중단, 녹색금융 투자 유도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노동자들의 녹색일자리 전환 교육지원
미래통합당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공약 없음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 없음
민생당	미포함 ("2030년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 감축")	공약 없음	공약 없음	화석연료 에너지 감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창출
정의당	203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해당 공약 없음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 (2030년 재생에너지 40%로 대폭 상향조정)	대대적 재생에너지 투자로 20만개 일자리 창출, 정기로운 전환 프로그램, 그린뉴딜 전환 안전망 기금 조성
자유공화당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국민의당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공약 없음
민중당	미포함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폐쇄")	공약 없음	공약 없음	공약 없음
친박신당	미포함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감축")	공약 없음	원전 재개	공약 없음
녹색당	2030년 석탄발전소 폐지	해외 석탄발전소 및 화석연료 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2030년 탈핵, 탈석탄, 재생에너지 30% 확대, LNG 발전 가동률 상향 및 민자LNG 과세강화	전환기 기본소득 시행, 정기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출처 : [보도자료] “2030년 석탄발전 퇴출” 요구, 정의당과 녹색당 공약화

[보도자료] 민주당·정의당 “재생에너지확대” VS 미래통합당 “탈원전 폐기” (03.27)

에너지전환 대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강화 등 그린뉴딜 정책 급부상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당 일제히 시대역행 탈원전 반대 공약만
원내정당 대부분 에너지전환법, 핵폐기물 대책 등 정책 미흡

기후위기의 가속화와 지속적인 핵발전의 위협 등으로 에너지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쟁화됨에 따라 재생 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 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다만 정확한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과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숙제로 남았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 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고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며 에너지전환의 필수 요소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하기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 태도를 나타냈다. 민생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은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통합당을 비롯한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탈핵 분야에서도 서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4개 정당은 모두 ‘탈원전 정책의 폐기 또는 재검토’를 공약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만이 현재 탈원전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 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기만 할 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쳐진 모습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이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자는 황당한 주장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재생에너지	탈핵	에너지 효율화
더불어민주당	-비중 지속 확대 -RE100 시장제도 활성화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공약 없음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 지원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
미래통합당	-태양광 국정조사 및 특검	-탈원전 정책 폐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	공약 없음
민생당	공약 없음	공약 없음	-녹색 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정의당	-재생에너지 3040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 투자, 2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 없음	-마을녹색전환운동 -공공임대주택 넷제로 건물 도입
우리공화당	공약 없음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 없음
국민의당	-정책 전면 재검토	-탈원전 정책 재검토 -4세대 원전 개발	공약 없음
민중당	공약 없음	공약 없음	-에너지 세제, 전력시장 개편
친박신당	-태양광 발전소 해체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원전 건설 재개	공약 없음
녹색당	-2050 재생에너지100%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2030 탈핵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	-2030까지 에너지 소비 50% 절감 -공공, 민간 주택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선관위에 공약을 등록하지 않은 열린민주당은 평가에서 제외함. 원외 정당 중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녹색당은 평가 대상에 포함

출처 : [보도자료] 민주당·정의당 “재생에너지확대” VS 미래통합당 “탈원전 폐기” (환경운동연합, 2020.03.27.)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그린 뉴딜’ 한목소리 (04.02)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그린 뉴딜’ 한목소리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일자리 창출 내건 ‘그린뉴딜’ 공약 일부 진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와 퇴출 공약은 정의당, 녹색당이 유일, 주요 정당들 외면
미래통합당 ‘재탕’ ‘헛발질’ 미세먼지 공약 남발, 기후변화 대책 외면
환경운동연합, 21대 총선 앞두고 각 정당의 기후위기, 미세먼지 공약평가

2020년 4월 2일 — 21대 총선에서는 과감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녹색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그린 뉴딜’ 공약이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각각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와 ‘그린뉴딜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진전된 공약이 등장했지만,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과 친환경차 전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비롯한 구체적 공약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 평가에 이어 각 정당의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공약을 비교해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과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분석해 평가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탄소제로사회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1.5℃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순배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정도의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당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mu\text{g}/\text{m}^3$)으로 40%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공약했고, 4-5종 소규모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만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업시설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킨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핵심인 민간을 포함하지 않은 공공에만 한정된 대책인데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 이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탕 대책이다. 미래통합당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교체에 대해서도 ‘실태점검’하겠다는 정도로 미온적 공약을 내걸었다. 산업 배출원에 대한 오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대책보다는 ‘공단지역 등 미세

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라는 헛발질 공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약 내용이 없어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했다.

민생당은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과 100만개 환경일자리 창출과 같은 진전된 공약도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체육관 보급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포함됐다.

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석탄발전 퇴출뿐 아니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고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었다. 100만호 그린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추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과 같은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와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하는 데 그쳤고, 자유공화당은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전면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

녹색당은 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같이 적극적 기후위기 대책을 공약했다.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같은 구체적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기후변화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하다고 혹평하며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상승해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거듭되는 가운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의회는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한 가운데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과 교통 체계를 고수하다간 기후위기와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및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및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끝>

	공약 세부 내용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 탄소중립사회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 -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자전거, 수소연료전지) 육성 -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세제 지원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전국 평균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 - 원격개선훈련체계 확충, 저탄소 투자 확대 - 산단지역 실시간 탄소 감화, 사업장 배출가스 감시센터 부착 확대 4·5층 소규모사업장 발지시설 자발사업 1만개소로 확대 - 에너지제로빌딩 건축에 대한 지원 강화, 건물·공장·주택에너지관리 분야 전문기업 육성
미래통합당	- 국회 전반기대(21년) 미세먼지 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 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강화 -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 어린이와 학생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면 교체하기 위한 실태점검, 어린이집과 유치원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지원 - 월평균 정액 폐기
민생당	- 한국판 그린뉴딜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 추진, 미세먼지의 온실가스 50% 감축 -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VR) 체육관 보급 - 동유럽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 효율화로 50만개 명차리 창출 - 호남권 거두대기산업 복합 실증형 클러스터 구역별 조성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2030년 감축목표를 법적 계획으로 추진, 기후피해 및 손실비용 조성 -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시장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 비용의 배분
정의당	10년 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20만개 일자리 창출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전략을 집합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및 전기차 대체, 1,000만 전기차 시대 개막,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제한 및 도심전입 금지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코리아 차차 프로젝트' 표준화, 범용화 전부 주도로 추진 200편으로 그린리모델링(다중주택재난안전) 사업추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은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
우리공화당	- 탄소세 도입, 10년 한시 녹색채권 발행 - 해당 공약 없음 (유류세 폐지 공약)
국민의당	- IoT형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 - 지하철 역사와 역실 내 미세먼지 청화시설 설치
민중당	- 탄소배출권 등 다중영문시장에 대한 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제 도입, 정확한 감축 유도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총량관리지역 확대, 대기배출부과금 오염자 부담 원칙 실현, TWS 실시간 공개 -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진박신당	- 경유 차량의 감소를 위한 정책 수립 - 미세먼지 수질생지인 증감에 대한 대응방안 시행
녹색당	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 기후위기대응기본법 제정, 배출가능한 온실가스량 최우선하는 '탄소예산' 도입 -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이 기후위기 대응 위한 의사결정 참여하도록 시민의회 구성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35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 전국적 그린리모델링, 제로에너지 빌딩화 - 탄소세, 보건 예산 감축, 탄소배출기업 과세, 미세먼지원 배출허용에 대한 잠발적 과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웹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선관위에 공약을 등록하지 않은 열린민주당은 평가에서 제외함. 원외 정당 중 구체적 공약을 제시한 녹색당은 평가 대상에 포함

출처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그린 뉴딜' 한목소리 (환경운동연합, 2020.04.02.)

[별첨 2] 20대 총선 공약

▶ 새누리당

새누리당 정책목록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 새누리가 만들겠습니다!	▽

출처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책목록

1.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
2.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4.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5.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6.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7. '777 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
8.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

[출처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 국민의당

국민의당 정책목록

1. [경제]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2. [정치]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
3. [복지]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이겠습니다.	▼
4. [청년]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
5. [노동·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6. [어르신]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
7. [교육]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
8.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9. [농림수산축산업]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10. [안전]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출처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 정의당

정의당 정책목록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
9. 차별없는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다양한 언론문화사회	▼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

출처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 노동당

노동당 정책목록

1.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종식과 연대적 노동사회 실현	▽
2.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3. 기본복지 확충	▽
4. 조세재정개혁	▽
5. 정치선거제도 개혁	▽
6. 탈핵과 생태적 전환	▽
7.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	▽
8. 사회공공성 강화	▽
9. 청년 정책	▽
10. 사회 재생산 위기의 해소와 일·가족·생활의 균형	▽

출처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

▶ 녹색당

녹색당 정책목록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
2. 기본소득과 노동전환	▼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
4. 차별 없는 평등사회	▼
5. 주거권 보정과 토지정의	▼
6. 동물권 보장	▼
7. 교육(배움)의 녹색화	▼
8. 탈토건 안전사회	▼
9. 한반도 비핵평화	▼
10. 민주주의 회복	▼

출처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